

## 農漁村 發展綜合對策과 山林問題

### —그 試案을 보고—

李 在 石 / 농림수산정책 자문위원

政府는 農村의 零細한 營農構造와 就業機會不足 등으로 經濟與件이 취약함으로써 都農間에 격차가 생기고 相對的 貧困으로 소외감을 가진 農村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위하여 農漁村 發展綜合對策을樹立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 綜合對策은 農林水產部가 이미 農漁民 與論을 청취했고 關係部處의 協議를 거친것으로 안다.

그 重點 推進施策의 内容을 보면 農業構造改善, 農產物價格安定, 農外所得開發, 農漁民 負擔輕減 農水產物 輸入自由化에 따른 補完對策, 農水產行政 體系의 改善等이 重要 골자로 되어 있다.

이 試案은 이미 新聞紙上에 報道가 되어 모두 알고 있는 일이지만 89년부터 92年까지 4個年 동안 農村定住圈 開發을 為해 地方道路의 포장을 為始해서 農業基盤施設을 整備擴充하고 農村의 間接資本形成等에 無慮 16兆원을 投入하는 計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는 農山村 問題 解決을 위하여 여러차례 計劃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過去의 計劃들이 큰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진것은 오늘의 農村問題에 接近을 못한것들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번 農漁村 發展綜合對策(案)은 그 計劃自體가 農村의 現實에 接近하려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것은 農業構造改善을 위해 農

漁村公社를 設立하고 專業農家에 農地購入資金을 支援하고 非農家의 農地를 買入하여 農地의 長期賃貸制度를 마련 한다는것은 時宜에 適切한 措置로서 높이 評價할만한 일이다.

事實은 우리 農村도 이제 零細農의 農村社會政策에 머물때는 지났다고 본다. 農產物의 輸入開放壓力을 아무리 뿌리친다하더라도 그것은 限界가 있는것이고 國內產 農產物價格의 支持政策도 限界가 있다.

그래서 農業構造를 改善하여 資本制 農業으로 政策轉換을 함에 있어 必然的으로 뒤를 따라야할 機械化問題와 營農資金의 金利 引下같은것은 참으로 劃期的인 措置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本計劃에 있어 크게 問題되는것 몇가지를 指摘하지 않을수가 없다.

그것은 農村經濟問題를 다룸에 있어 一般農業 特殊農業 畜產 林業 漁業이 서로 有機的으로 連結이 되어 있어 이를 따로 따로 생각할수가 없는것이 事實이다.

例를 들면 山林問題이다. 農山村에 絶對比重을 차지하는 광활한 이 山林 特히 國民의 休息空間의 擴大라는 次元에서 여기에相當한 높은 比重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山林開發事業團의 運管과 山林利用規制의 緩和한 消極的인 計劃만 되어 있다.

農村開發이라해서 一般農業에 局限할 때

그範圍는 大端히 좁다.

山林의 多目的利用과 國民休息空間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선 林道를 닦아야 한다.

이 林道는 國民의 生活空間을 擴大 한다는데도 意味가 있지만 그동안 애써 가꾼 山林資源이 산불이나서 一朝一夕에 잣더미가 되어도 林道가 없어서 산불을 끌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造林으로부터 育林, 伐出에 이르기까지 生產費 節減을 위한 機械化를 林道가 없으면 할수가 없다.

그래서 이웃 日本의 林道密度 절반 水準으로 林道를 設置한다 해도 89年부터 92년까지 12,000km를 닦아야 한다. 여기에 所要되는豫算도 2,400億원에 達한다.

또 오배자등 被害木 소나무 까지벌레 被害木 經濟性이 없는 不良林地等은. 除去하고 時急히 樹種更新 造林을 要하는 林地도 計劃期間內 年 10萬町步씩 40餘萬 町步를 造林을 해야한다.

이에 소요되는豫算도 2,800億원에 達한다.

이 林道와 樹種更新造林에 所要되는 莫大한豫算을 確保하는 방안은 종전의 일반 예산에서는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번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의 一還事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16 Page에서 계속

#### 다. 잡목 속아베기 및 덩굴치기에 적용할 경우

(단위 : 천원)

작업별	헥타당 경비			비율		비고
	계	인건비	약재대	인력	경비	
인력작업	195	195(15인)	-	100%	100%	헥타당 3,000본기준
글라신액제처리	129	39(3인)	90(91)	20	66	

\*인력 80%, 경비 34%절감.

따라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도 그 이름을 농산어촌 발전 종합대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계획을 보면 일반농업에 대한 조림개선, 기계화추진 자금의 지원, 가격 안정 행정체계의 개선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임업도 이러한 지원계획에 흡수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일반농업, 축산, 산림, 수산업이 각각 계획되어 농업이란 큰 범위안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특히 농어민부담 경감에 있어 농어촌부채 특별조치로 계획 기간내에 연간 1,500억원에서 1,900억원에 달하는바 이것은 영세농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인줄 알지마는 이제 우리도 탕감이다 무상이다 하는것은 재고를 해야될줄 믿는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열매를 돌려주어야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마당에 탕감하고 무상으로 줄 재원이 있으면 봄철에 산에서 조림하는 인건비라도 보조를 해서 여기에서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風土造成이 바람직하다 하겠다.